

---

#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

2014. 6. .



운영지원과

# 목 차

I. 201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 .....	1
II. 2013년도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	3
III. 201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	6
IV. 201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8
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계 .....	8
나. 반부패 취약분야 개선 .....	10
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 활동 강화 .....	10
② 청렴 옴부즈만 및 민관협력체 운영 .....	11
③ 부패영향평가 지원 .....	11
④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연구 .....	12
다. 반부패 제도개선 및 청렴활동 .....	12
⑤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12
⑥ 청렴교육 활성화 및 청렴인식 제고 .....	13
⑦ 기관장 및 고위공무원 청렴리더십 활동 .....	14
⑧ 청렴 인프라 구축 및 수범사례 확산 .....	15
라.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강화 .....	15
⑨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15
⑩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시 처벌 강화 .....	16
마. 과제별 추진일정 .....	17
V. 행정사항 .....	18

## □ 국제적 환경

- 과거에는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에는 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경제성장률을 좌우
- 국가청렴도 증가가 1인당 국내 총생산, 해외투자 증가 등의 요인이 되어 국가의 신뢰도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짐
- 영국과 미국 등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규범 강화,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반부패 운동 등 부패척결 활동 고조

## □ 국내적 환경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도 39위에서 2013년 46위로 3년 연속 하락 추세
-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가 2012년 한 건도 없었던 데 비해, 2013년에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22건이 발의 되어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인식 확산

## □ 외부환경

-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및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가 요구됨
- 방송의 공정성과 함께 통신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요구됨

□ 내부환경

- 방통위 조직 축소 이후, 업무 부하량은 증가한 반면 인력은 부족하여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 추진에 어려움
- '14년 4월 새로운 위원장 취임에 따라 직원들의 부패방지에 대한 긴장감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의 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반부패 정책 SWOT 분석 >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비위행위 적발이 용이함</li> <li>■ 미래부와 협업이 많아 부패행위 가능성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성격상 규제 업무가 많아 부패 유발 요인이 있음</li> <li>■ 조직의 규모가 작고 인력 부족으로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 추진이 어려움</li> </ul>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경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부패행위에 대한 긴장감 조성</li> <li>■ 새로운 위원장 취임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절차를 생략하거나 대충 처리하려는 내부 인식</li> <li>■ 규제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인식</li> </ul>

## II

# 2013년도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58.4점으로 V등급으로 평가

※ 중앙행정기관(41개) : I등급 8개, II등급 6개, III등급 16개, IV등급 7개, V등급 4개

◆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외부 민원인 및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렴도 종합점수는 7.67점으로 Ⅲ등급 평가

###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야

#### <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구 분	종합 평가	평가부문별 결과						
		반부패 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 신뢰성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의식· 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청렴도 개선	부패공직자 발생
중앙행정기관 평균	80.9	89.8	78.1	75.0	87.9	81.9	71.4	84.4
방통위	58.4 (5등급)	55.7	64.9	40.4	37.4	60	50.2	100
차이	△22.5	△34.1	△13.2	△34.6	△50.5	△21.9	△21.2	15.6

※ '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 40개 중 29위, IV등급이었음.

※ 기관유형 및 평가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12년도와 '13년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 < 분 석 >

○ (종합)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58.4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보다 22.5점이 낮으며 '12년도보다 한 단계 낮아진 V등급을 받았음

- 부패 공직자 발생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았으며 반부패 관련 제도 마련과 활동 부문 등에서 저조한 점수 획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반부패 인프라 구축) 평균보다 34.1점이 낮은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문의 청렴인센티브 제도 운영 평가에서,
  - 금지 금품 신고자에 대한 우대제도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  
회의 실적이 없었음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평균보다 34.6점이 낮은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부문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평가에서,
  - 권고과제\* 이행실적이 미흡하였고, 조치기한 도래 전 사전이행  
대상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이 없었음
    - \* 권익위는 공용차량 보험가입시 경쟁입찰,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퇴직공직자 소송 몰아주기 방지 등 총 27건 권고
  -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실적 및 반영 실적이 저조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평균보다 50.5점이 낮은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부문 평가에서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및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평가에서  
타 부처간 협력 실적이 없어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됨

### < 개선방안 >

-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렴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금지 금품  
신고자에 대한 우대 및 포상 제도를 신설하고,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을 위해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와  
법령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기한 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며,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을 위해 타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 실시, 방통위 청렴문화 개선방안 마련 추진

## □ 기관 청렴도 평가 분야

### < 연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 >

구 분	대 상 기관수	종합청렴도 (청렴도 수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3년도	14개	7.67(3등급)	7.52(4등급)	8.25(3등급)	7.27(3등급)
'12년도	14개	7.83(3등급)	8.26(2등급)	7.91(4등급)	6.48(4등급)
차 이		△0.16	△0.74	0.34	0.79

※ 방통위, 병무청, 금융위, 환경부, 공정위, 국토부, 농림부, 관세청, 식약청, 고용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13년 기준)

### < 분 석 >

- (종합) 검찰청, 경찰청, 공정위 등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13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방통위는 7.67점을 획득(3등급) 중위권
  - ※ '12년도와 비교해보면 종합청렴도가 7.83점에서 0.16점이 하락하였음
- (외부청렴도) 방통위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청렴도는 7.52점으로 '12년도보다 0.74점이 하락하였음
  - 외부평가 설문대상으로 통신사 대리점 등이 조사대상자로 처음 포함되면서 업무처리 반감 등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내부청렴도) 내부 직원 평가는 8.25점으로 '12년도 대비 0.34점이 상승하였으며, 평균 8.20점 보다 높은 수준임
- (정책고객평가) 학계,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산하기관 및 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는 7.27점으로 '12년도 대비 0.79점이 상승

### < 개선방안 >

- 관련 실·국 및 운영지원과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
  - ※ '14년도 청렴도 설문 대상에서 이통사 대리점 제외 방안 권익위와 협의 추진
-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중요성 인식과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자체 청렴교육 강화

# 참고 : 2013년도 기관별 반부패 경쟁력 및 청렴도 평가 현황

□ 반부패 경쟁력 평가

1등급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2등급	국가보훈처, 통일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조달청
3등급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4등급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외교부, 농촌진흥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5등급	<b>방송통신위원회</b>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 밑줄은 기관유형이 ‘소규모 기관’으로 방통위와 동일한 평가대상 그룹

□ 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병무청, 통계청, 법제처
2등급	관세청, 금융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촌진흥청, 통일부, 산림청, 국가보훈처
3등급	<b>방송통신위원회</b> ,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상청, 방위사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4등급	해양경찰청, 국세청,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문화재청
5등급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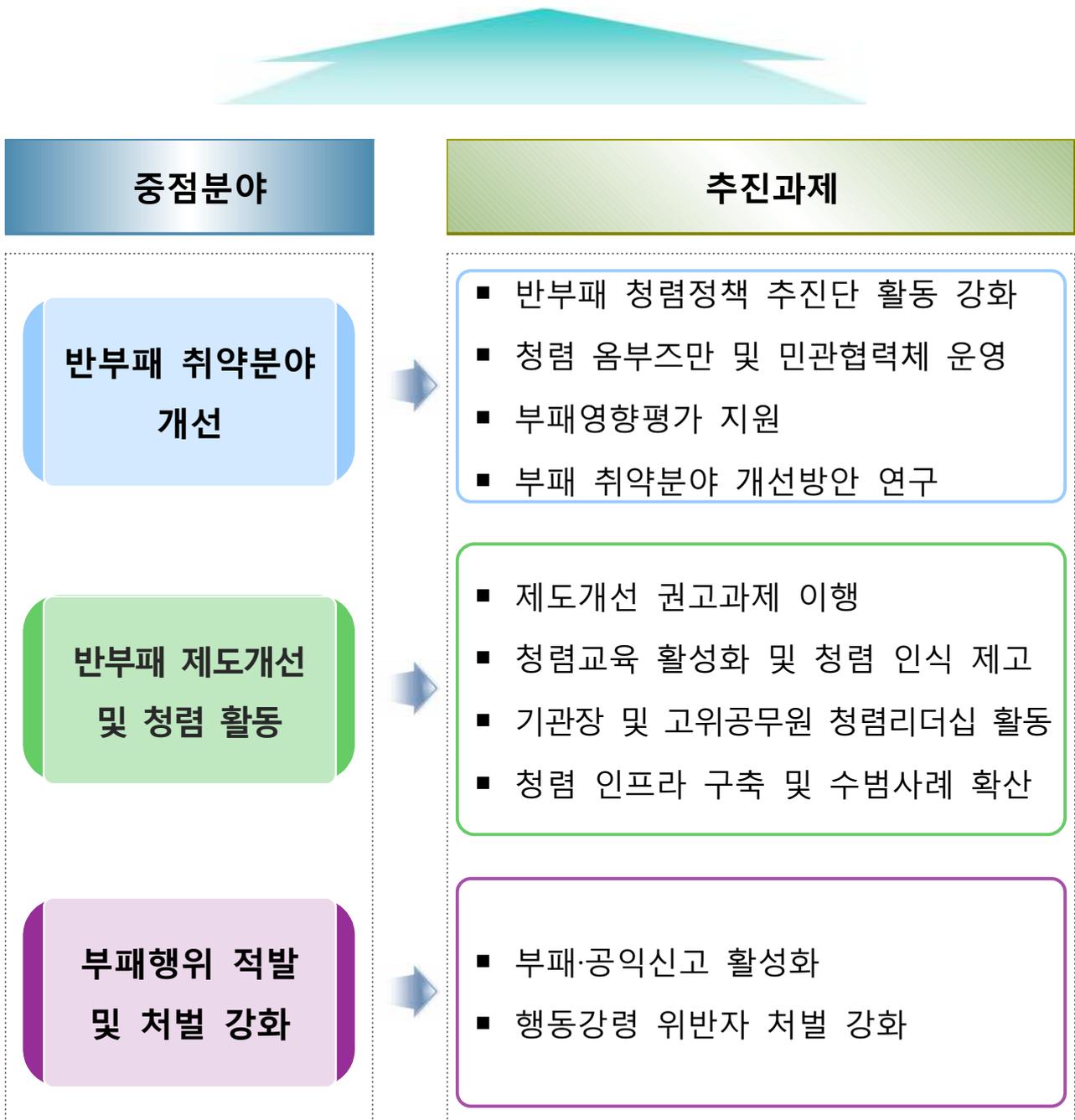
※ 밑줄은 기관 유형이 ‘수사·단속·규제기관’으로 방통위와 동일한 평가 대상 그룹

Ⅲ

201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목표

깨끗하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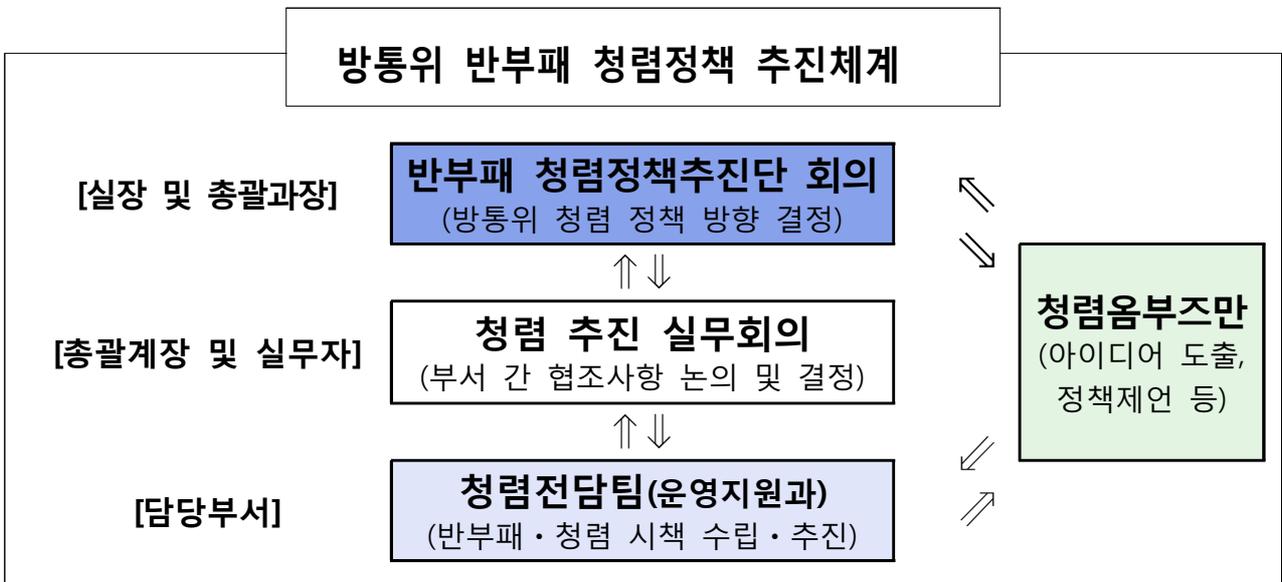
# IV

## 201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계

#### □ 개요

-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방통위 청렴 추진체계’ 구축·운영



####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반부패 청렴정책추진단 회의) 실장을 단장으로 각 실·국 총괄과장, 운영지원과장(간사) 등으로 구성, 분기 1회 운영
- 반부패 청렴정책,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반부패 관련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의결 및 주요 의사결정

- (청렴 추진 실무회의) 각 실·국 총괄계장, 총괄 주무관, 청렴담당 계장 (간사) 등으로 구성, 분기 1회 운영
    -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청렴향상 아이디어 제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방안 실무 검토 추진
  
  - (청렴전담팀) 운영지원과내에 청렴전담팀을 구성하여, 반부패·청렴, 공직기강, 공직윤리 및 민원 업무를 총괄하며, 상시 운영
  
  - (청렴음부즈만) 대학, 연구소, 법조계,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등 5명으로 구성, 필요시 수시 운영 (분기 1회 이상)
    - 직무수행과정에서 부패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권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반부패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언 등 수행
- ※ 청렴음부즈만(일명 : ‘시민 감사관’)은 제3자의 시각에서 부패 취약분야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음부즈만(Ombudsman, 대리인) 운영 (권익위 권고사항)

< 방통위 청렴음부즈만(Ombudsman) 역할 및 권한 >

- ① 주요 정책(업무)에 대한 시정 권고·의견 제시, 감사요구
- ② 방통위 자체감사 참여, 주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③ 청렴 취약 분야(연구·계약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비리 제보
- ④ 반부패 관련 정책 검토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 등 수행

※ 권익위의 ‘14년 반부패 관련 기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역할 및 권한 부여

## 나. 반부패 취약분야 개선

### 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 활동 강화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을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청렴정책 이행을 위한 활동 강화
  - 연간 3회 이상 시행하고, 매회 추진일정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추진

###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 〉

#### ① 구 성

-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창조기획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방송기반총괄과장
- 간 사 : 운영지원과장

#### ② 임 무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반부패 관련 주요사항 의사 결정, 제도개선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관련 의사결정 등

#### ③ 회의운영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서면회의 가능

## ② 청렴 옴부즈만 및 민관협력체 운영

### □ 청렴 옴부즈만 활성화

- 임기 만료된 청렴 옴부즈만 재정비 및 위원 위촉 추진

※ 그동안 민간위원의 위촉기간 만료로 현재는 민간위원이 없는 상태임

- 연간 운영방안 수립 후 종합감사·청렴워크숍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시 정책검토 수행

※ 보조금 사업, 공사·계약 등 감사 시 청렴 옴부즈만의 전문지식 활용

### □ 민관협력체 운영

- 청렴성 향상을 위해 민간인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렴 관련 각종 캠페인, 행사, 반부패 협력 사업 등에 활용

## ③ 부패영향평가 지원

### □ 내부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 개선과제는 조치기한 내에 완료하고 이행 실적 제출

- 행정규칙에 대한 제·개정시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 제정 또는 전부 개정인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부패와의 연관성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및 자체 부패영향평가 시행 철저

##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공정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도덕적 해이, 불공정·불투명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
  - 제·개정 법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즉시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개선권고 의견 제시시 권익위에 관련 내용 통보
- 현행 법령중 권익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④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연구

- 방통위 내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과제 시행
  - 국내·외 규제기관의 반부패 제도 및 최근 동향 및 반부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부당한 사익추구, 고질적 비리 등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 다. 반부패 제도개선 및 청렴활동

## ⑤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분기별로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권고과제 이행상황 점검
  - 제도개선 권고과제는 관련 실국이 5월중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

- 반부패청렴정책추진단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의 분기별 이행실태 집중 점검
- 권익위 권고과제 담당 과장 및 담당 직원은 권익위 권고과제가 조치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
- 매분기말까지 권고과제 수행부서에서는 '제도개선 이행 추진실적'을 운영지원과에 제출

## ⑥ 청렴교육 활성화 및 청렴인식 제고

###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감사 및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익위 주관 청렴 강사과정 등 전문교육 실시
- 월례조회, 간부직 워크숍 등에 청렴 특별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하되 연간 최소 3회 이상 실시
- 신규 전입자, 5급 승진예정자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과정에 반부패 청렴과정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청렴교육 실시

### □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 공직자의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 등 공직의 각 전환단계에서 일정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실시
-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청렴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계획 수립

**<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방안 >**

대 상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 4,5급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목 표	청렴을 내면화하여 청렴초심을 유지	승진 후에도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몰입	사회지도층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유지
시 간	임용 후 1년이내 5시간	승진 전 10시간	고위직 진입시부터 1년 이내 5시간
내 용	공직자의 기본자세,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	주요 부패사례, 윤리적 갈등상황 및 대처방안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고, 이해충돌상황 대처법 등
교육방법	기관 자체 교육, 사이버교육, 권익위, 중공교 교육 등		
사후관리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반영		

**㉚ 기관장 및 고위공무원 청렴리더십 활동**

기관장의 청렴의지 전파

-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 시기에 위원장 친서 발송
  - 월례조회 등에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조를 통해 방통위의 청렴노력 및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전파

고위공무원단 청렴 서약

- '12년도에 도입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을 승계하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보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실시
- 작성은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시기와 임용이후 인사(전입·보직 변경 등)시 의무적으로 작성
- 청렴서약서는 2부를 서명한 후 1부는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면서 청렴의무 준수

## ⑧ 청렴 인프라 구축 및 수범사례 확산

### □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우수 사례 도입·운영

- 반부패 경쟁력 우수평가 기관이나 행동강령 운영 우수기관의 수범 사례를 분석하여 방통위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적극 도입
- 미래부 등 반부패 우수기관 청렴업무 담당자와 매 분기 1회이상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회의 개최 및 우수사례 공유 추진

### □ 정보공개 확대

- 반부패 제도, 규정, 수범사례 등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추진
- 수의계약 현황, 기관장 및 상임위원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등 자료 공개

### □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 금지 금품 신고자 우대 및 포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등 반영 추진
- 반부패 수범사례 우수자에게 기념품 제공 등 보상방안 검토

## 라. 부패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 ⑨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기능 강화

-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창구 : 운영지원과
-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상담 : 감사담당 (☎ 2110-1316)
- 신고 및 이첩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직 사회에 청렴 분위기 조성

#### □ 공익신고 활성화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회 이상 자체 교육 실시
- 기관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 창구 개설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⑩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시 처벌 강화

- 공직기강 감사 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 및 편의제공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조사 및 처벌 강화
  - 국민권익위에서 이첩·통보한 사건 처리 철저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사항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
- 관행적 부조리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실시
  - 공직자에 대한 청렴인식을 저해할 수 있는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상시 점검 실시

#### < 참고 : 관행적 부조리 주요사례(예시) >

- 워크숍·세미나 등 회의개최시 과도한 숙소·교통 등을 지원받는 행위
-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직원 회식, 가정용품 구입, 휴일 집근처 사용 등)
- 친·인척, 퇴직공무원 등과 부당한 수의계약 등 혜택 제공
- 평가·심사 등과 관련 심사위원 정보 제공 행위

## 마.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가. 반부패취약분야 개선</b>												
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단 회의 개최					○	○	◎	○	☆	○	○	○
2. 청렴 옴부즈만 및 민관협력체 운영												
청렴 옴부즈만 위원 위촉 및 활동					○	◎	○	○	○	○	○	○
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						◎	○	○	☆	○	○	○
3. 자체부패영향평가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	○	○	○	○	○	○	○	☆	○	○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	○	○	○	○	○	○	○	☆	○	○	○
4.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	○	○	○	◎		
<b>나. 반부패 제도개선 및 청렴활동</b>												
5.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실태점검	○	○	○	○	○	◎	○	☆	◎	○	○	○
6. 청렴교육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월례조회, 간부직 워크숍 등에 청렴교육 실시						○		○		○		○
신규임용, 전입, 승진 등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	○	○		
7. 기관장 및 고위공무원 청렴리더십 활동												
위원장 메시지, 친서 발송 등 청렴의지 지속 전파					○	○	○	○	◎			◎
고위공무원 청렴 서약서 작성						◎						◎
8. 청렴인프라 구축 및 수범사례 확산												
반부패 우수 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우수 사례 도입·운영					○	○	◎	☆	○	○	○	○
반부패 제도, 수범사례 등 정보공개 금지 금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방안 마련 등 청렴인센티브 제도 마련							◎		○	◎	○	○
<b>다. 부패행위 적발시 처벌강화</b>												
9.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창구 개설 및 담당자 지정 운영					○	○	○	○	○	○	○	○
방통위 홈페이지내에 공익신고 창구 개설·운영					○	○	○	○	○	○	○	○
10. 행동강령 위반자 처벌 강화	○	○	○	○	○	○	○	○	○	○	○	○

※ 범례 ◎ : 중점 추진기간, ○ : 추진기간, ☆ : 추진사항 이행점검 기간

## □ 협조 요청사항

- 산하기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4.6.20.까지 제출
- 산하기관에서는 상반기 반부패 시책평가 성과보고서를 '14.6.30.까지, 하반기 성과보고서를 '14.10.20.까지 제출
  - 하반기 반부패 시책평가 성과보고서는 연도 종합분으로 작성·제출
- 산하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추진계획, 단위 과제별 이행실적, 반부패 수범사례를 '14.10.20.까지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2				
3				

[별지 제2호 서식]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 제도개선)

<b>최종작성일</b>		<b>소관부처</b>		<b>이행상황</b>
<b>과제명</b>		<b>기관명·부서명</b>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b>조치시한</b>		<b>담당자</b>		
		<b>연락처·메일</b>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별지 제3호 서식]

###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권고과제  자율과제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

최종작성일		관리번호		소관부처		이행상황
과제명				기관명·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조치시한				담당자		
				연락처·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별지 제4호 서식]

### 제도개선 이행자체평가

기관명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 메일	

반기별 이행상황 요약				
분류	완료과제	정상 추진과제	지연과제	합 계
권고과제				
자율과제				
부패과제				

분 류	완료과제 현황	정상 추진과제 현황	지연 과제 현황
권고과제			
자율과제			
부패현상 발생과제			